

생계형 기타대출, 1년새 34조원 늘어

전년 대비 11.5%↑
주담대 14.9%↑와 비슷

“제2금융권 증가율 16%
가계부채 뇌관 될 수 있어”

정부가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 공급까지 축소하며 사실상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나섰지만 ‘생계형 대출’로 불리는 기타대출은 담보대출과는 별도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대출이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 향후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은행과 비은행권 등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 잔액은 33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98조7274억원 대비 34조3652억원(11.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 활황을 등에 업은 주택담보대출이 474조3409억원에서 540조2130억원으로 13.89%(65조8721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기타대출의 증가세도 상당히 가팔랐음을 알 수 있다.

기타대출은 주담대를 제외한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신용대출 등 나머지 종류의 대출을 합한 것을 말한다.

담보가 없고, 대출절차가 간단해 당장 쓸 돈이 필요한 이들이 기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타대출을 생계형 혹은 생계비 대출로 부른다.

문제는 최근 기타대출 잔액이 비교 대상인 높은 제2금융권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포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미래를 코딩하다'를 주제로 '2016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 다빈치연구소장이 '미래교육의 암호를 풀다'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 신탁,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기타대출은 지난해 8월 141조 1877억원에서 올해 8월말 163조4342억원으로 15.70% 급증했다.

예금은행 기타대출이 157조5308억원에서 169조6585억원으로 7.6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이다.

이로 인해 전체 기타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7.2%에서 올해 49.1%로 사실상 절반 수준에 올라섰다.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주담대를 위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구입 등의 목적보다 실질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서민들은 제2금융권을 통해 꾸준히 기타대출을 받고 있다.

대출자가 고금리인 제2금융권 기타대출로 옮겨가는 것은 가계부채의 질이 낮아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향후 미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조영부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소득 및 담보 측면에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은행 대출이 더 어려워졌다”며 “이로 인해

대출 규제 강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집담대출 등 금리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부조건의 비중도 높은 대출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가계부채가 부실화된다면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청년층, 노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 무직자,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에서 먼저 표면화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이 비은행권 대출이나 신용대출의 형태로 부채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부양인구비율 1%p 오르면 경제성장률 최대 0.29%p ↓

2060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총부양인구 101명
“유휴인력 활용한 노동투입 확대 정책 추진 필요”

부양인구가 많아지면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산업은행의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양인구비율이 1% 포인트 상승시 경제성장률은 0.25~0.29% 포인트 하락한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최근 부양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비율을 보면 유소년인구(0~14세)가 13.9%,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73.0%, 고령인구(65세이상)가 13.1%다.

그러나 오는 2060년이 되면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각각 10.2%, 49.7%로 낮아지고 고령인구는 40.1%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총부양인구는 2015년 37명에서 2060년 10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비중 뿐만 아니라 절대수치도 올해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오는 2020년에서 2028년 사이 연평균 30만명씩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기전 산은 조사부 선임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고령층과 여성 등 유휴인력을 활용한 노동투입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에 참가 길을 넓히고 여성들이 일과 생활, 자녀양육 등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9월 수출물량지수 5개월만에 감소

135.90로 지난해 보다 2.6% 하락... 수출금액지수 5.1% ↓
수입물량지수 120.23로 2.3% 증가... 수입금액지수 0.5% 줄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이른바 ‘빅2’의 약재에 우리나라 수출물량지수가 다섯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물량지수는 135.90(2010=100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6% 하락했다.

수출물량지수는 지난 4월 3.3%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5월 화장품 및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5.9%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10.7%), 제1차 금속제품(2.9%), 정밀기기(6.9%) 등이 증가한 반면, 섬유 및 가죽제품(-3.1%), 석탄 및 석유제품(-8.8%), 일반기계(-6.8%), 전기 및 전자기기(-4.1%), 수송장비(-13%) 등의 하락폭이 컸다.

수출금액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1% 하락했다. 수출금액지수 역시 화학제품(6.6%), 제1차금속제품(2.7%) 등의 증가에도 전기 및 전자기기(-8.4%), 수송장비(-12.9%) 등이

감소해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수입물량지수는 120.23으로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6.5%), 석탄 및 석유제품(-5.3%) 등의 수입이 감소했으나 광산물(10.8%), 화학제품(6.2%) 등이 늘어나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수입금액지수는 96.0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5% 줄어들었다. 일반기계(11.3%), 화학제품(4.5%) 등이 올랐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7.7%), 석탄 및 석유제품(-15.4%)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수입금액지수 역시 수출가격(-2.5%)보다 수입가격(-2.7%)이 더 크게 내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상승률은 2014년 8월(-0.9%) 이후 2년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입금액지수가 상승했으나 수출물량지수가 하락한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한 138.26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1월(-2.4%)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뉴시스

기초생활수급자 실손보험료 할인 대상 확대

2009년 10월 표준화 이후 가입한 수급자가 갱신하는 경우도 5~10% 할인 적용

이달부터 2009년 이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약관이 표준화된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수급자가 갱신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만 부담해 일반가입자에 비해 보험금을 덜 받는다. 때문에 금감원은 2014년 4월 실손

의료보험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26개 보험사 중 25곳은 보험료의 5%를 할인하고 있으며, 알리안츠생명은 10%를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할인 적용대상이 제도 도입 이후 체결한 신계약으로 한정돼 있고 보험사의 안내 부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수급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에 불과했다. 2014년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도록 지도했다.

다만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보장체계가 현재와 달라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안내도 강화한다.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제도를 설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손질했다.

이와 관련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신설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이달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지도 개선방안을 송부하고 각 보험사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업무절차를 조속히 마련토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